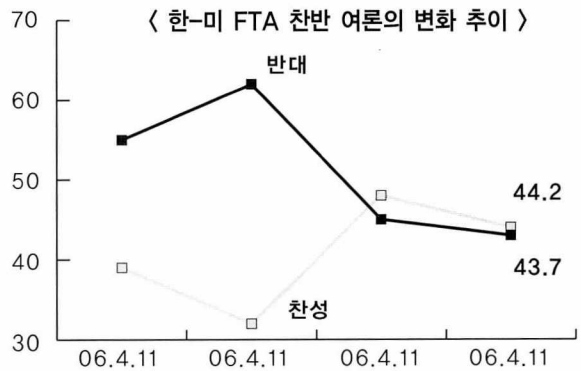


한-미 FTA 반대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시켜 결국 타결됐다. 타결 직전의 여론 조사를 보면, 먼저 찬성과 반대의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와 민주노동당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3월말 타결에 대해서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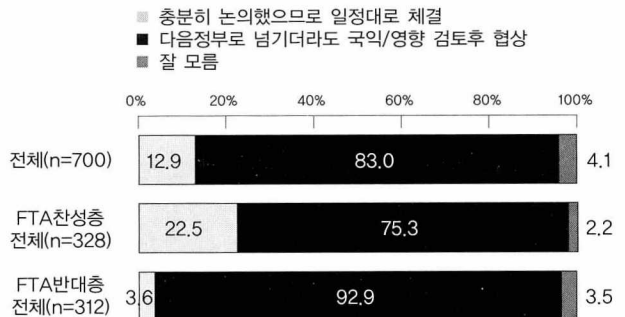
지난 1년간의 한·미 FTA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보면, 먼저 한·미간 협상의 경과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찬성(33.2%), 반대(62.1%)로 여론의 반감이 강했다. 이후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고, 지난 2월21일 조사에선 찬성의견(48.3%)이 반대의견(44.8%)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러나 찬성 여론은 불과 한 달만에 44.2%로 약세를 보이며 반대여론과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찬성론이 왜 기력을 잃었을까. 그 대답은 실무협상 막바지에 표면화한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협상태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70.8%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는 응답 20.0% 보다 월등히 높았다.

범국민과 민주노동당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역시, 80%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찬성 측에서도 70%가 넘는 응답자가 당초 일정대로 3월 말에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내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은 찬성(46.8%), 반대(44.5)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응답자 가운데 "이미 충분히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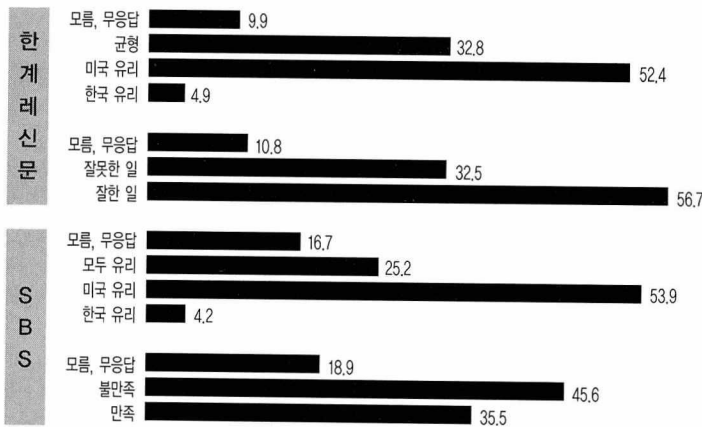


〈 정부의 올 상반기 한미 FTA 체결 입장에 대한 견해 〉

의했으므로 일정대로 체결해야 한다”에 답한 응답자는 12.9%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협상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여부에 대해서 국민 열명 중 여섯 명 이상(63.2%)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데 찬성한 반면,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미 FTA 인지도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62.1%의 응답자는 ‘한-미 FTA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7.9%는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



결국 많은 국민이 한-미 FTA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실을 통해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한-미 FTA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홍보물을 광고하는데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한-미 FTA 반대 광고를 막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타결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타났다. 언론 매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미 FTA 타결에 대해서 먼저 합의 내용은 “미국이 유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는데, 타결 여부에는 ‘찬성’이 높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 대상자가 설문 주제에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설문 결과가 바로 한미 FTA 협상

정부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한-미 FTA 반대론자들을 쇠국주의자로 매도하고,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라는 어처구니없는 조직을 결성하여 정부의 홍보세력으로 가동시키고, 대다수 언론의 일방적인 긍정 평가를 유도했다. 반면 한-미 FTA 반대세력은 범국본의 모든 FTA 반대 집회는 불허되어 불법 시위로 묘사되었고, 반대 FTA TV 광고는 ‘사실상 불허’에 해당하는 ‘조건부 방송 가’로 판정받았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미 FTA 협상의 초기부터 타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국민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범국본을 포함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정부가 행한 많은 위법적인 행위와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거둘 경우 분명 여론의 흐름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